최근 일본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실질임금 하락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13년 하반기 일본 GDP성장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엔저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와 가계소비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.

- 일본의 연 환산 기준 GDP성장률은 2013년 1/4분기와 2/4분기 각각 4.5%, 3.6%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3/4분기와 4/4분기 각각 1.1%, 1.0%로 다시 하락함.
- GDP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엔저로 인한 수출 확대 효과가 부진한 가운데 수입물가 상승과 원자재 수입 부담 증가 등 어려움이 확대되었기 때문임.
- 또한 가계소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2013년 4/4분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0.5% 증가에 그쳤으며,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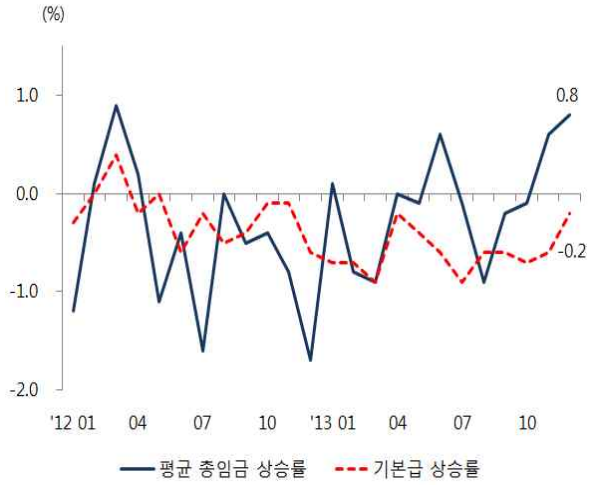
■ 가계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기본급 인상이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뚜렷한 기본급 인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.

-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5인 이상 근로자 기업의 평균 총임금은 2013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0.8% 상승하였고 초과근로 수당과 상여금도 각각 4.6%와 1.4% 상승함.
- 그러나 소비 심리와 미래 기대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급의 경우 2012년 6월 0.6% 하락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2013년 12월에도 0.2% 하락함.
- 이와 관련하여 아베 총리는 임금 인상이 가계소비와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달성이 경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업들의 임금 인상 노력을 강조함.

■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수준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비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영한 충분한 수준의 임금 인상이 요구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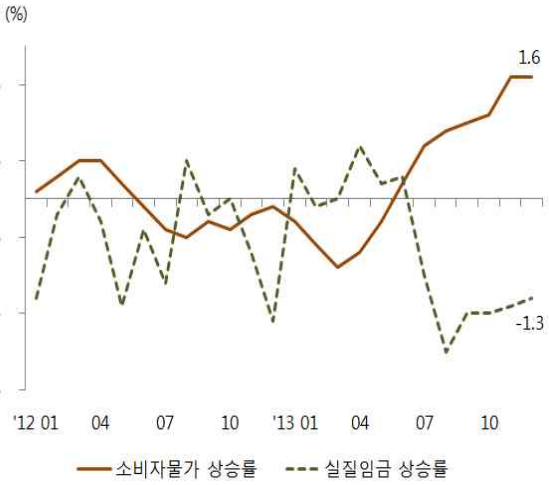
-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3월 전년동기 대비 0.9%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2월 1.6%를 기록하고 있음.
- 반면, 일본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2013년 6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12월 −1.3%를 기록하였으며, 4월 소비세가 예정대로 현행 5%에서 8%로 인상될 경우 실질임금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- 따라서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계소비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물가 수준을 반영한 충분한 수준의 기본급 인상이 필요해 보임.

〈그림 1〉 일본 총임금 및 기본급 상승률 추이



자료: 일본 후생노동성.

〈그림 2〉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질임금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, 일본 후생노동성.

한편, 일본은행(BOJ)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함.

- 일본은행은 현재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있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2%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, 현행 연간 약 60조~70조 엔 규모의 본원통화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함.
- 또한 2014년 3월 말 종료 예정인 특별대출 프로그램[1]을 2015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해당 특별대출 프로그램의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함.
- 이와 같은 일본은행의 조치는 소비세 인상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.

1) 일본은행이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도입됨.

■ 우리나라 경제도 최근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민간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- 최근 우리나라 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수출 증가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아지고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둔화되었으며, 따라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한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함.
-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민간소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.
- 그러나 임금 상승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금 인상을 통해 민간소비를 증진시키기보다 고용 제고를 통해 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.

(FT, 연합뉴스 등)